

---

#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

2016.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 순서

I. 평가 개요 .....	1
II. 부문별 평가결과 .....	5
1. 국정과제 평가 .....	5
2. 규제개혁 평가 .....	27
3. 정책홍보 평가 .....	35
4. 정상화과제 평가 .....	44
5. 기관공통사항 평가 .....	54
(1) 정부3.0 .....	54
(2) 부처간 협업 .....	63
(3) 특정시책 이행관리 .....	70
III. 기관 종합평가 .....	79
IV. 후속조치 계획 .....	83





## I. 평가 개요



# I. 2015년 평가 개요

## 1. 평가개요

### □ 평가 대상

- 기관 :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
- 기간 : 2015.1.1~12.31

### □ 평가 부문

- ① (국정과제) 국정과제 및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 성과 창출 뒷받침
- ②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경제활성화 및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③ (정책홍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와 체감도 제고
- ④ (정상화과제) 정상화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및 노력을 평가하여 기본이 바로선 국가 확립 뒷받침
- ⑤ (기관공통사항) 정부3.0, 부처간 협업, 특정시책 이행노력과 성과 평가

### < 201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14년 평가	2015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50</li> <li>▪ 규제개혁 25</li> <li>▪ 정상화과제 25</li> <li>▪ 기관공통사항 ±15</li> </ul> <p>* 홍보(±5), 정부3.0(±3), 협업(±3), 특정시책(±2), 업무태도(±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과제 50</li> <li>  + 핵심개혁과제(과제당 최대 ±1)</li> <li>▪ 규제개혁 20</li> <li>▪ 정책홍보 20</li> <li>▪ 정상화과제 10</li> <li>▪ 기관공통사항 ±10</li> </ul> <p>* 정부3.0(±5), 협업(±3), 특정시책(±2)</p>

## 2. 평가방법

-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국조실 등)이 평가지원단\*을 구성, 평가항목에 따라 1차적으로 정량·정성 평가 병행
  - \*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참여
-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과제별, 평가자별, 평가부문별 편차를 조정, 최종 심의·의결

### < 평가 부문별 주관 >

평가 부문		주관	평가지원단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 포함)		국무조정실	국정과제평가지원단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규제개혁평가지원단
정책홍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평가지원단
정상화과제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평가지원단
기관 공통	정부 3.0	행정자치부	정부3.0평가지원단
	협업	국무조정실	협업평가지원단
	특정시책	고용부·복지부·중기청 등	-

## 3. 평가결과 제시

- 평가결과는 장관급과 차관급 기관을 분리하여 기관별 등급을 우수·보통·미흡으로 제시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제시





## II. 부문별 평가결과



# 1. 국정과제 평가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전반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

###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2개)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안전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차관급 (20개)	인사처,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구성(500명)
  - 분야별 민간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참여, 10개 분과로 구성
- 분과별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정성평가 병행 실시
- 주관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기관은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을 선정(21개 기관, 35개 과제),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 평가지표

○ 집행이행도(20%), 성과지표달성도(40%), 정책효과(40%)\*를 평가

\* 국민만족도(10%), 인지도(2%) 조사결과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집행이행도	•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 2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금융위	인사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안전처, 공정위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기상청, 새만금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국방부, 복지부, 권익위	보훈처,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 □ 대내외 정책 추진여건

- 공공부문의 비효율, 경직된 노동시장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규제 등 구조 개혁 필요성 대두
- 중국 경기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및 북한 지뢰도발 등 한반도 정세 불안 요소 상존

### □ '15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노동·교육·금융 분야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구조 개혁 실시,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맞춤형 고용·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민생안정 노력 강화
- 국민안전정책 혁신,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 및 외교지평 확대

### □ '15년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한계

#### < 성 과 >

- 핵심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창조경제·경제혁신 성과 창출 본격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기반 조성
- 주거·교육·의료·통신비 등 국민부담 경감, 맞춤형 복지·의료정책 본격 시행으로 성과 가시화
- 주변국과의 협력 수준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 증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 구축

#### < 한 계 >

- 메르스 사태, 핵심법안 입법지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일부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한 성과목표 미달성
- 세계경제 침체, 청년실업, 가계부채, 경제활성화 및 개혁법안 통과 지연 등으로 국정과제 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는데 한계

▶ '16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국정과제 추진 및 성과 확산·홍보에 주력

## 4 국정기조별 평가

### (1) 경제부흥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를 맞아 한-중 FTA 발효, 창조경제 확산 및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등 성과 창출
-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가계부채·주거비 부담 등으로 국민의 체감도 개선에는 한계

### 주요 정책성과

- 재정 확대와 투자활성화 노력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
  -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22조원),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확대로 내수 중심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
    - \* 총투자 증가율(%) : ('12)  $\Delta 0.5$  → ('13) 3.3 → ('14) 3.1 → ('15) 3.8
    - 민간소비 증가율(%) : ('12) 1.9 → ('13) 1.9 → ('14) 1.8 → ('15) 2.1
  - 사상 최대 규모(209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의 GDP 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상승 전망(IMF)
    - \* 외국인투자(억불) : ('13) 145.5 → ('14) 190.0 → ('15) 209.1
- 제2의 벤처·창업붐 확산 등 창조경제 성과 창출 본격화
  -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15.7월)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10배 이상 증가
    - \* 창업보육(45→578개사), 투자유치(115→1,267억원), 고용창출(5→283명)

○ 벤처기업수 3만개, 신규 벤처투자 2조원 돌파

\* 벤처기업수(개) : ('12) 28,193 → ('13) 29,135 → ('14) 29,910 → ('15) 31,260

\* 신규 벤처투자(억원) : ('12) 12,333 → ('13) 13,845 → ('14) 16,393 → ('15) 20,858

○ SW수출 증가 등으로 ICT 수출액이 세계 4위에서 3위로 상승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ICT 발전지수 평가 세계 1위 차지

\* SW수출(억불) : ('14) 53.3 → ('15<sup>e</sup>) 60.2

○ 인터넷 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 도입기반 마련 및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확대(27.9조원)

□ FTA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 한-중·베·뉴 FTA 발효로 시장규모가 세계 GDP의 73.5%로 확대

\* FTA 체결국의 전세계 GDP 비중(%) : ('13) 54.1 → ('14) 60.4 → ('15) 73.5

경제적 효과 : 10년간 실질GDP 1%, 소비자후생 150억불, 고용 5.4만명 증가

○ 낮은 단기외채비율, 외환보유액 확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에 따라 3대 신용평가사 모두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평가

\* Moody's('15.12.19) : Aa3 → Aa2, S&P('15.9.15) : A+ → AA-, Fitch('12.9~) : AA-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민생경제 안정 도모

○ 「하도급법」 개정('15.7월)으로 수급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신고포상금제 도입, 소규모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포함 등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및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 총 1.4만호 사업추진 확정, 6천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 실시

○ 4대 정책서민금융\*을 47만명(4.7조원)에게 지원하고,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5.6만명 채무조정 실시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 정부·대학의 장학금(7조원)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평균 50% 수준 경감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상향(12→20%) 등으로 가계통신비 감소

## 문 제 점

### □ 어려운 대내외 여건이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제약

- 低유가·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충격 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한

\* 수출액(억불) : ('14) 5,727 → ('15) 5,272 (△7.9%)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

### □ 민생안정 정책 관련 국민 체감도 미흡

- 가계부채 지속 증가로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美 금리인상 영향 가시화시 한계 가구·기업 중심으로 부담 심화 우려

\* 가계부채(조원) : ('14) 1,085 → ('15.3/4) 1,166

-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 평균 전세가격(백만원) : ('14) 전국 143, 수도권 192 → ('15) 전국 161, 수도권 219

-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계형 업종(음식·숙박업 등) 과밀진입에 따라 과당 경쟁 및 수익성 하락

\* 생계형 자영업자 수·비중(천명, %) : ('10) 541(9.7) → ('15) 599(11.1)

### □ 해외진출사업과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요구 지속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부처·기관간 연계·협업 부족\*,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성과 미흡 및 관련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상담 주선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KOTRA·수출지원센터(중기청)·중진공 등 다수 기관이 수행 중

-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이 15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부처간 중복 투자 및 융합연구 저해



## 개선·보완 방향

- ◇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활성화와 수출회복 등으로 경제활력 강화
- ◇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구현 지속 추진,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노력 가속화

### □ 창조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 기술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규제 프리존 도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新산업 전략 추진
-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시장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및 자율적인 사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

### □ 내수기반 강화, 신품목 육성·신시장 창출로 수출 회복

- 양질의 일자리 확충,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등 소비여건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유망 서비스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제활성화 입법 노력 강화
- 유망 소비재·신성장 부품의 수출 촉진 및 한·중 FTA 계기 중국 소비재·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 □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대기업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단속 확대
- 불법사금융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소비자 상담센터 활성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확대

□ **민생안정 정책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체감도 제고**

- 가계 대출구조 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등), 美 금리인상 가능성 및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저리 전세자금 및 월세가구 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16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상권정보시스템 확대 등 자영업 경쟁력 제고 및 희망리턴패키지 제도\*·사업전환 지원 등 재기·전직지원 강화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컨설팅·교육·융자 등 패키지 지원

-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성과 확산, 차질없는 FTA 보완대책 이행, 재해보험 확대 등으로 농어가의 소득 확충 및 경쟁력 제고
-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제도 설명 의무화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소비자 혜택 확대

□ **해외진출사업 추진체계 및 R&D 거버넌스 개편 추진**

- 다수 부처·기관 수출지원사업의 유사·중복 해소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수출지원사업 효율화
-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사업전략 재편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체계 개편
- 부처간 R&D 중복투자 방지, 융합연구 강화 등을 위해 18개 R&D 전문관리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
- 과학기술정책원\* 설립 추진으로 과학기술 Think Tank 기능 강화

\*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와 기획·평가(KISTEP) 기능 통합

## [2] 국민행복

- ◇ 노동·교육개혁 적극 추진을 통한 능력중심사회·창의교육 기반 확산, 맞춤형 고용·복지 확대
- ◇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등으로 국민적 혼란 초래, 높은 청년 실업률·저출산율 지속 등 체감지표 개선 성과 미흡

### 주요 정책성과

#### □ 노동개혁 적극 추진 및 고용인프라 확충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 사회적 합의 도출
  - \* (노사정 대타협, '15.9월)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3대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임금제도 개선)의 해결, 사회안전망 확충 등
- 고용복지+센터를 확충(10→40개소)하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 □ 자유학기제 등 창의교육 및 능력중심사회 기반 확산

-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811 → 2,551개교)
  -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제도\* 도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2,079 → 5,764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확산('15년 105개 공공기관)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년 9교), 고교-전문대 통합과정(Uni-Tech, '15년 16개 사업단) 운영 등

####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료정책 확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7월 시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기준 297 → 485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수급자 수 : ('14) 133 → ('15) 165만명 (32만명 ↑)

○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3대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

\* 유방재건술 등 258개 항목 급여화로 1,803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선택진료 의사 축소(80 → 65%) △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강화(50 → 70%)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확대(28 → 112개소)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지속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수립(「브릿지 플랜 2020」)

\*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의 구조적 원인해결로 전환

○ 다자녀 우대 확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97→243개),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및 노후준비 지원정책\*\* 추진기반 마련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5→10%), 셋째이상 대학등록금 지원(1→2학년까지) 등

\*\* 연금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도입('16.1월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시행('15.12월)

□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생활 속 체감 안전지표 개선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15.3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5.2~4월), 안전신문고 운영 등을 통해 사전 예방·대응 체계 강화

○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체감지표 지속 개선

성 폭력 재범률(%)	('12) 7.9 → ('13) 6.4 → ('14) 5.4 → ('15) 5.0
가정폭력 재범률(%)	('12) 32.2 → ('13) 11.8 → ('14) 11.1 → ('15) 4.9
학교폭력피해 응답률(%)	('12) 8.5 → ('13) 2.1 → ('14) 1.3 → ('15) 0.95
식품안전 체감도(%)	('12) 67.0 → ('13) 72.2 → ('14) 73.8 → ('15) 79.6

□ 환경·산림서비스 개선 기반 마련

○ 수도권쓰레기매립장 사용연장 합의('15.6월) 및 「통합환경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제·개정('15.12월)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강화

\* 분산된 6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통합·간소화, 허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등

○ 저소득층 산림복지 혜택을 위한 「산림복지진흥법\*」 제정('15.3월)

\* 기초생활수급자 등(약 146만명) 대상 1인당 10만원 바우처 제공

## 문 제 점

### □ MERS 초기대응 부실 등으로 국민적 혼란 초래

- 다수의 환자 발생 뿐 아니라 교육·관광·산업생산 등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직·간접적 손실 야기

\* 메르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약 6.3조 (보건경제학회)

### □ 저출산 및 노인빈곤·아동학대 문제 지속

\* 합계출산율(명) : ('12) 1.30 → ('13) 1.19 → ('14) 1.21 / OECD 평균 1.7명('13)

\* 노인빈곤율(% , 66세이상) : ('12) 48.5 → ('13) 49.6 → ('14) 48.8 / OECD 평균 13%('13)

\*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15.1월),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15.12월) 등

### □ 중앙정부·지자체 간 누리과정 예산갈등 반복

\* 서울·경기·광주·전북·전남·강원·세종 등 7개 시·도교육청 '16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15.12.31일 기준)

### □ 노동개혁 입법 지연 및 청년고용률 저조

-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반발로 노동개혁법안\* 입법 등 제도화 지연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산재 인정) ▲기간제법(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법(파견요건 완화)

- 청년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에 비해 저조한 상황 지속

\* 고용률 : ('13) 64.4 → ('14) 65.3 → ('15) 65.7%

\* 청년(15~29세) 고용률 : ('13) 39.7 → ('14) 40.7 → ('15) 41.5%

### □ 인권보호체계 구축·지방분권 등 사회통합의 가시적 성과 부족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및 「인신보호법」 제·개정 지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연 등

## 개선·보안 방향

- ◇ 감염병 등 신종 재난에 대한 국민안전 관리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교육 개혁 지속 추진
- ◇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 및 복지재원 마련 등 사회 갈등 해소 노력 강화

### □ 메르스 대책 등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및 내실화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의 차질없는 이행 및 의료 이용 문화 개선 등 의료관련감염대책의 현장 정착 노력

\*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 ▲외래 감염병 유입 차단 ▲안전한 진료 인프라 구축 등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이행·점검, 원자력 안전 개선 및 지자체 등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 '15년 국민 안전체감도(안전처) 24.9% / 원전안전 신뢰도(원자력문화재단) 41%

### □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역량 집중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의 차질 없는 실행으로 출산율 제고, 노인빈곤율 완화 등 구체적 성과 도출

\* 출산율 목표(명) : ('14)1.21→('20)1.5 / 노인빈곤율 목표(%): ('13)49.6→('20)39.0

-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15.1월)\* 이행 및 '아동학대 예방종합 대책'(14.2월) 보완\*\*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 CCTV 운영현황 점검, 어린이집 부모 참여 활성화, 보육교사 자격 및 처우개선 등

\*\* 학교기능 강화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속·체계적 조사·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등

□ 복지재원 논란 등 사회갈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

- 시·도교육감 설득, 지자체 협조, 대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논의 재개\* 및 부정수급 개선 지속 추진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은퇴 본격화에 따라 관련 문제제기 심화 전망

□ 노동개혁 완수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등 노동개혁 완수 노력
- '고용률 70% 로드맵'(13년 수립) 추진상황 종합점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동력 강화
- 정년 60세 시행(16년)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변화 대응 철저  
\* 민간부분 임금피크제 확산지원,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고용 지원 확대 등

□ 교육개혁 등 교육현장의 정책체감도 제고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준비에 만전('15년 2,551 → '16년 3,204개교)  
\* 질 높은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 교사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 「대학구조개혁법」 조기입법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연계 등 대학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적극 추진
- NCS 기반 직업교육 안정적 정착\* 등 능력중심사회 착근 노력 강화  
\* '16년부터 전체 특성화·마이스터고에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 사회통합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노력 및 대응 강화

- 「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제·개정 로드맵 마련, 부처별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 [3] 문화융성

-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수출액 증가 등 문화융성 기반 강화
- ◇ 핵심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 제작 여건 및 예술인 복지 여건 지속 개선 필요

### 주요 정책성과

-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등 문화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15.2월)\*, 문화창조벤처단지 완공('15.12월)\*\*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사업화 지원 본격화
    - \* 35건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 / \*\* 93개 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원스톱 사업화 지원
  - 융복합펀드(1,385억원) 조성, 향후 5년간 53천여명 일자리 창출 전망
  -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지속 증가
    - \* 매출액(천억원) : ('14) 953 → ('15) 999, 수출액(억불) : ('14) 53.2 → ('15) 57.5
- 관광호텔 설립 규제 완화 등 관광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 「관광진흥법」 개정('15.12월)으로 향후 2년간 23개 호텔 건립, 15천개 일자리 창출 및 8천억원 투자유치 기대
  - 봄·가을 관광주간을 실시, 국내여행 활성화 및 내수활력 제고
    - \* 관광주간 국내여행자 수(만명) : ('14) 2,971 → ('15) 3,720 (25.2% ↑)
- 문화국가 위상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 유네스코 세계유산 4건\* 신규 등재
    - \* ▲백제역사유적지구 ▲KBS 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교책판 ▲줄다리기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등 성공적 운영
    - \* 테러·사고·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대회 운영, 하계 국제종합경기대회 사상 최초 우승



□ 문화가 있는 날, 인문학 프로그램 등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 ('14.1월) 19 → ('15.11월) 45.2  
참여율(%) : ('14.1월) 28.7 → ('15.11월) 37.2  
도서관·박물관 인문학 강연 참여인원 확대 ('14) 174→('15) 228천명

**문 제 점**

□ 메르스 등 대외여건 악화로 외래관광객 유치목표 달성 차질

-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 시행 등 관광수요 회복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입 목표 달성에는 한계
- \* 외래관광객 수 : ('15년) 1,323만명 (목표 1,550만명)  
총 관광수입(추정치) : ('15년) 156억불 (목표 194억불)

□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의 지역 편중

-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을 위한 6개 거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 지방창작자 이용 불편
- \* 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상암동), 벤처단지(서울, 청계천), 아카데미(서울, 홍릉), K-Culture Valley(경기, 고양시), K-Exprience(서울, 송현동) K-Pop 아레나(서울, 송파)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처우개선 관련 법령 개정 지연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영리 문화법인 인가 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등 개정 지연
- \* 문화예술단체의 법정 자격요건 완화, 재정적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필요

-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상황
- \* 주1회 이상,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생활체육참여율(%) : ('13) 45.5 → ('14) 54.7 → ('15) 56.0(목표 56.6%)

## 개선·보안 방향

- ◇ 관광콘텐츠 확충,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창작자의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발전적 지원기반 확충
- ◇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체감도 제고 노력 강화

### □ 지역별 핵심 관광콘텐츠를 집중 육성, 관광경쟁력 제고

- 지역의 문화·생태를 이용한 관광콘텐츠 확충,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일부지역(서울, 제주)에 집중되는 외래관광객의 전국 확산방안 강구

### □ 지역 창작자 지원 기반 마련

-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와 문화인프라 시설(116개)\*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창작자의 창작 여건 개선

\* 음악창작소, 스토리랩, 작은영화관 등 정부 지원 거점 기관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 강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고용보험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추진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한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 체감도 제고\* 필요

\* '15년 만족도 조사결과 정책수요자 중 문화예술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

### □ 체육동호회, 프로그램 확충 등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확대, 성·연령 등 계층별 분석 등을 통해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 ◇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신뢰외교 정착 및 북한 도발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태세 구축
- ◇ 북측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남북협력 및 북핵문제 해결 지연, 연이은 방산비리로 국민신뢰 저하

#### 주요 정책성과

-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 및 국제사회에 기여 증대로 신뢰외교 정착
  - 42년만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15.11.25 발효)으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 수출 등에 대한 자율권 강화
  - 한·일·중 정상회담('15.11월)으로 동북아 3국 외교 정상화 토대 마련, 대통령 중동·중남미 4개국 순방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원 확보
    - \* 중동 순방('15.3월)시 9억달러, 중남미 순방('15.4월)시 6.5억달러 규모 수주 상담
  - 경제·기후변화·재난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적극 참여
    - \* 터키 G20 정상회의시 IMF-OECD 주관 성장전략 이행평가 2위('15.11월), 에볼라 긴급구호대('15.1~3월), 네팔 지진 긴급구호대('15.4~5월) 파견 등
-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구축 및 병영문화 개선
  -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추가 도발 억제 및 남북 8.25 합의 타결에 기여
    - \* DMZ 지뢰 도발('15.8월)에 대해 1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 「병영문화혁신 추진계획」('15.9월) 수립, SNS를 활용한 부모-부대간 소통 활성화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도 향상
    - \* 국민 신뢰도(글로벌리서치) : ('14.8월) 47.8 → ('15.11월) 71.8%

## □ 통일준비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및 탈북민 정착 지원

- 남북 8.25합의를 통해 남북간 일시적 긴장 해소
- 1년 8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개성만월대 공동 발굴 등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 확대
  - \* 인도지원 규모(승인액 기준) : ('14) 210 → ('15) 266억원
- **미래행복통장**(탈북민 자산형성지원제도, '15.11월 가입시작)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탈북민 고용률 일부 개선
  - \* 탈북민 고용률 : ('14) 53.1 → ('15) 54.6%

## 문 제 점

## □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 증대

- 북한의 예고 없는 4차 핵실험('16.1.6)등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 고조
- 6자 회담 및 남북 비핵화 협상 고착상황 장기화\*
  - \* 6자회담 : '08.12월 이후 미개최 / 비핵화 협상 : '11.9월 이후 미개최

## □ 방위산업 관련 국민 신뢰 저하

- 연이은 방산·군납비리\* 적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핵심 기술 확보 논란 등으로 국민적 우려 지속
  - \* 해상작전 헬기(와일드 캣) 도입 비리, 해군 호위함, 고속함 수주과정 뇌물수수 등

## □ 북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실질적 남북간 협력관계 난항

- 제1차 남북당국회담('15.12월) 결렬 및 남북협력 사업 추진 담보
  - \* 남북 공동 산림·하천공동관리 등
- 북한 미참여 등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가시적인 성과 부족

## 개선·보안 방향

-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 및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실화
- ◇ 방산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 □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핵에 대한 제재·압박 강화

- 미·중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추진
- 양자·다자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조치 및 주변국과 협력하여 제재 조치의 실질적 이행 담보 노력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실화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성과 확산

-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지속 전달 등 분명하고 일관된 대북 대응 원칙·기조 유지
-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뿐만 아니라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홍보강화 등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병행 필요

### □ 군의 무기획득 체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방산비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비리예방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이행 관리

\*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등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15.10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16.1월) 등

- 한국형 전투기 개발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연 등 범국가적 기술역량 결집

## [5] 신뢰받는 정부

- ◇ 「청탁금지법」 제정, 연금관련법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정부신뢰 회복 노력
- ◇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논란 및 각종 비리의혹 지속으로 국민 체감 다소 미흡

### 주요 정책성과

#### □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알선·청탁 등 관행 근절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개정('15.3월)
  - \* 취업제한기간 연장(2→3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비영리분야 포함 등), 고위공직자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등
- 반부패 노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 \*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아시아부패지수 : ('14) 7.05 → ('15) 6.28점, 공공기관 청렴도 : ('14) 7.78 → ('15) 7.89점

#### □ 연금관련법 개정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공무원연금법」(15.5월), 「사학연금법」(15.12월) 개정 완료('16.1월 시행)
  -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절감('16년 1조5천억원)
-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부채 감축 및 부채비율 개선\* 등으로 '07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 감소\*\*
  -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부채비율 : 216%('15년 목표 222%)
  - \*\* 공공기관 부채규모 전년대비 0.5조원 ↓('07년 이후 매년 40조원 증가 추세)

##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 경제단체 간담회, 규제신문고, 지방규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기업 애로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규제 집중 발굴·개선**
- 규제개선 우수사례 표본조사(39건) 결과('15.10월), 연간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1만 2천개 일자리 창출**

\* 올해의 정부정책 5선중 규제개혁 분야를 2위로 선정('15.12월 대한상공회의소)

## □ 공공정보 및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

- 건강·연금·세금 등 **맞춤형 생활정보 21종** 통합 제공(민원24)\*, 법령-행정규칙, 법령-조례 연계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등

\* 서비스 이용자(만명) : ('14) 30 → ('15) 92 (206%↑)

- SGIS(통계지리정보), KOSIS(국가통계포털)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서비스(주거지분석, 기업금융분석서비스 등) 개발, 국민생활 편의 제고

## 문 제 점

## □ 새로운 법·제도 도입 초기단계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 지속

-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지연, 동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 범위 등에 대한 논란
- 공무원 연금개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에 따른 **공직사회 사기 저하**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 □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국민 불신 야기

- 일부 기관의 자녀채용, 금품수수 관련 비리 의혹 등 계속되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로 국민 체감 다소 미흡

-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난립 및 관리 부실 우려
  - 각종 행사홍보를 위한 일회성 홈페이지와 유사·중복 앱 개발에 따른 예산낭비 및 사후관리 부실 지적 지속

**개선·보완 방향**

- ◇ 새로운 법·제도의 조속한 정착 지원 등 신뢰정부 구현 지속 추진
- ◇ 윤리교육 강화 및 비리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연착륙 도모
  - 「청탁금지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설득을 통한 이견 해소 및 하위법령의 조속한 마련 등 차질없는 법 시행 준비
  -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노력 지속
  - 고위공직자 등 대상별·기관 특성별 맞춤형 윤리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부패 사전예방
  -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일관성·지속성을 가지고 엄정 대처, 비리 유형 분석 및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의 후속조치 강화 등 사후관리 철저

-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관리 효율화
  - 공공부문 웹사이트·모바일앱 정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관간 중복 개발 방지 및 활용도 제고 대책 마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15.11월) 등



## 2. 규제개혁 평가

### 1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 평가대상

- 27개 중앙행정기관(직제순)

구 분	경제부처(13개)	사회부처(14개)
장관급 기관 (18개)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9개)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안전처 (9개)
차관급 기관 (9개)	관세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4개)	인사처, 보훈처, 식약처, 경찰청, 문화재청 (5개)

※ '14년말 기준 등록규제가 30개 미만인 기관 제외

#### □ 평가방법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 지원단\*」 구성·운영(총 20명)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규제실 실·국장급 공무원 등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부처특성을 기준으로 2개 분과(경제, 사회)로 나누어(grouping) 평가

\* △'핵심규제 이행실적' 등은 정량적 평가, △'개선노력도' 등 정성적 항목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단에서 평가, △'규제개혁 만족도'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

□ 평가지표(100점, +5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핵심규제 정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규제 발굴실적</li> <li>• 핵심규제 이행실적</li> <li>• 개선과제 난이도 및 노력도</li> </ul>	정성/ 정량	15점
경제단체 건의과제 이행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단체 건의과제 수용 실적</li> <li>• 경제단체 건의과제 이행실적</li> <li>• 경제단체 건의과제 난이도 및 노력도</li> </ul>	정성/ 정량	15점
기존규제 정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규제 정비과제 발굴실적</li> <li>• 기존규제 정비과제 이행실적</li> <li>• 일몰 실적</li> <li>• 기존규제 정비과제(일몰 포함) 난이도 및 개선 노력도</li> </ul>	정성/ 정량	10점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영향분석 내용의 충실성</li> <li>• 규제영향분석서 TF 검토 의견 반영 충실성</li> <li>•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비율</li> </ul>	정성/ 정량	10점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적, 추진기반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과제의 적절성</li> <li>• 비용·편익 분석 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성</li> <li>•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기반조성</li> </ul>	정성/ 정량	10점
규제신문고 수용 및 이행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건의 답변 준수 실적 및 충실성</li> <li>• 규제건의 수용·이행실적</li> <li>• 대국민 만족도 및 개선 노력도</li> </ul>	정성/ 정량	10점
규제홍보노력 등 홍보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정보포털 홍보실적</li> <li>• 보도자료 등 부처 홍보실적</li> <li>• 규제개혁 홍보 노력</li> </ul>	정성/ 정량	10점
손톱 밑 가시 수용 및 완료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톱 밑 가시 과제 수용실적</li> <li>• 손톱 밑 가시 과제 완료실적</li> </ul>	정량	5점
자체 규제위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대면회의 심사율</li> <li>• 자체 심사의견서 내용의 충실성</li> </ul>	정성/ 정량	5점
행정조사 발굴·정비실적, 인증 정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조사 발굴·정비실적</li> <li>• 인증제도 정비 과제 이행실적</li> <li>• 지방규제 정비실적</li> </ul>	정성/ 정량	+5점
규제개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 만족도 측정</li> </ul>	정성	10점

\* 100점 만점 평가 후 20점으로 전환

## 2

##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미래부, 행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중기청
보통	기재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안전처, 금융위	인사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공정위	보훈처, 특허청

## □ 주요 성과

-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역량 집중
  - \* VIP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15.5,11월), 국무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15.7,10,12월)
  - \* '15년 정부정책 5선 중 2위로 규제개혁 선정(53%, '15.12월 대한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건의과제, 규제신문고, 손톱 밑 가시 처리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집중 개선
  - \* (경제단체 건의과제) '14.12월 1차 수용과제 114건 중 113건(99.1%), '15.7월 2차 수용과제 123건 중 114건(92.7%) 완료, '15.12월 3차 건의과제 90건 중 73건(81.1%) 수용
  - \* (규제신문고) 수용률 40.1%('15.11월 기준)
- 규제개혁 최초 지방규제 전수 조사 실시, 11대 분야 발굴·정비
  - \* '15.12월말 정비완료 5,171건(80.3%), 입법예고 이상 진행 5,929건(92.1%)
- 규제비용총량제 실시기반 마련 등 시스템 혁신 지속
  -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14년 7개 → '15년 15개 부처),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15.7월), 규제등록체계 개편('15.10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 및 국회 설득
- 규제집행 과정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선현장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관행 개선 및 현장성과 가시화 추진
- 규제개선 효과를 고려한 핵심과제 선정 및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 모색

## 4 분야별 평가결과

### 파급력 큰 핵심분야 규제개혁

#### 주요 정책성과

- 핵심분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1만2천개 일자리 창출  
(‘1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150건 중 39건 표본조사 결과, ’15.10월)
    - \* (주요사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민간출자 확대(3,400억원 투자),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675억원 투자, 150명 고용유발) 등
  - 203개 인증 전수조사·현장조사 실시 및 정비 추진
    - \* 약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5천억원 비용절감 및 8천억원 매출증가 기대 (KDI 검증, ’15.9~10월)
  -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확대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국제 유전자치료 시장 선점 및 바이오헬스 시장 확대 기대

#### 문 제 점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관련 주요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법안 통과 필요
- 핵심과제에 추진이 용이하고 개혁 효과가 미미한 과제 일부 포함

#### 개선·보완 방향

-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
- 해결이 어렵더라도 규제개선 효과를 고려한 핵심과제 선정

##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 주요 정책성과

- 경제단체 건의과제, 규제신문고, 손톱 밀 가시 처리 등을 통해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파악 및 해결
  - (규제신문고) 부처답변(14일이내)→부처소명(국조실)→개선권고(규개위)의 처리절차 확립, 수용률 40.1% 달성('15.11월)
    - \* ('15) 40.1%(3,097/7,963건) > ('14) 36.6%(2,301/6,281건) > ('13) 8%(24/300건)
  - (경제단체 건의과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 규제애로를 부처 소명회의 등을 통해 단기간 집중 개선
    - \* '14.12월 1차 수용과제 114건 중 113건(99.1%), '15.7월 2차 수용과제 123건 중 114건(92.7%) 완료, '15.12월 3차 건의과제 90건 중 73건(81.1%) 수용
    - ※ 주요 개선사례 : 학교정화구역 호텔설립 허용, 전문건설업자 복합공사 수주범위 확대 등
  - (손톱 밀 가시) 경제단체, 기업인 등 건의 과제 1,625건 중 198건 발굴
    - \* 전체 198건 중 12월말 완료 과제 162건 기준 158건 완료(97.5%)

### 문제점

- 업역다툼, 이해관계자 갈등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여전히 답보상태
  -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안경사 타각적 굴절기기 사용 허용 등
- 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선에 반영 필요

### 개선·보완 방향

- 주관부처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조정 및 창의적 대안\* 강구
  - \* 글로벌 기준 및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대안 제시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 주요 정책성과

- 규제개혁 최초 지방규제 전수 조사, 11대 분야 6,440건 발굴·정비 추진
  - 국토·산업 등 우선정비 5대 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3단계 정비
    - \* 과제 정비시한(안) : 1단계 '15.10월말, 2단계 '15.12월말, 3단계 '16.3월말
    -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자체 역할 설명, 지방규제 추진상황 발표·정비 독려('15.7월)
  - 정부 3.0 차원에서 '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등을 통해 정비 과제 여부, 정비율 등 공개
    - \* 총 6,440건 중 입법예고 이상 진행 5,929건(92.1%), 정비완료 5,171건(80.3%) ('15.12월말 기준)
  - 전국규제지도 공표를 통한 지자체 규제개혁 현황 공개 및 독려
    - \* 전국 규제지도 공표 후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등급 지자체수 대폭 증가 (S,A등급 : '14.12월 68개 → '15.12월 110개)

### 문제점

-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노력 부족 및 지역 현장에서 건의한 불합리한 중앙규제 개선 미흡

### 개선·보완 방향

- 지역경제활성화 저해 규제 등 현장과 괴리된 중앙규제를 발굴·검토하여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Bottom-up)
- 적극행정 교육 및 상벌강화, 규제집행 과정상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태규제 개선 추진

## 규제시스템 혁신

### 주요 정책성과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7→15개 부처)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실시기반 확충
  - 규제 비용·편익 분석의 계량화(자동산정시스템 도입)를 통해 부처의 규제영향분석 질적 수준 제고
- (규제등록체계 개편)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규제의 투명한 관리 및 미등록 규제 발생 차단
  - \*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 '사무'에서 객관적인 규제 '조문'으로 변경, 규제등록 시스템을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반영

### 문 제 점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국회제출('14.8월),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15.12월)
- 중앙정부 규제와 지자체 조례·규칙의 체계적인 연계성 부족

### 개선·보완 방향

- 정부 내 조치(총리 훈령 등)를 통한 규제비용총량제 조속 실시
  -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 병행
- 법령과 조례·규칙 간 연계시스템 개발 등으로 중앙-지방 간 정부 3.0 실현



### 3. 정책홍보 평가

####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와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평가와 동일)

□ 평가방법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 분야별 7명(민간전문가 5, 문체부 국민소통실 2)

□ 평가지표(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정과제 홍보활동 및 부처 협업홍보 (30점)	•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	10점
	• 부처간 협업홍보 실적	13점
	• 언론 오보대응 실적	7점
국정과제 홍보성과 (70점)	• 방송·신문 보도성과	23점
	• 기관장 홍보활동 성과	12점
	• 온라인 홍보활동 성과	20점
	• 국정홍보과제 홍보결과	15점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		±2점

\* 100점 만점 평가 후 20점으로 전환

## 2

##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국토부	인사처,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보통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보훈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원안위
미흡	법무부, 해수부, 안전처, 권익위	법제처,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 □ 주요 성과

- 4대부문 구조개혁 및 24개 핵심개혁과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민체감형 성과홍보 집중 전개
  - 선도적 기획홍보 및 부처간 연계·협업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노사정대타협 등 성과 창출 및 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
- 대통령 해외순방 계기, 실리외교 등 외교성과와 창조경제 등 경제성과 집중 홍보, 국제사회 위상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 기관장 언론홍보 활동 및 적극적인 현장행보 실시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 강화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메르스 사태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초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미흡 및 혼선으로 국민신뢰 저하
  - 국가적 재난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보완 등 위기대응 홍보관리 강화
- PC에서 모바일로의 온라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웹 운용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등 매체환경변화 대응 부족
  - 카드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확대 추진

## 4 분야별 평가결과

### ① 정책홍보 활동

#### 주요 정책성과

#####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맞춤형 홍보기획 추진

- 4대부문 구조개혁 및 24개 핵심개혁과제 등 주요 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연계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기획 활성화
  - 국정 아젠다에 대한 선도적 기획 홍보와 국민눈높이에 맞춘 성과 홍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전개
    - \* SNS, 페이스북, 유튜브, 웹툰 등 온라인 활용 주요정책 홍보메시지 노출확대
  -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정부3.0 등 주요 국정과제 관련 홍보 TF 운영 등을 통해 전략적 홍보기획 및 부처간 협력홍보 강화

##### □ 정책발표 사전협의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홍보 지원

- 핵심개혁과제, 국정아젠다 등 주요 정책의 발표시기, 핵심메시지, 예상쟁점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 \* 부처 정책발표 사전협의 총 239건,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15.12월말 기준)

공공개혁	▪ 공무원연금 개혁(인사처)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행자부)
노동개혁	▪ 노동개혁(고용부)	▪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개소식(여가부)
교육개혁	▪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교육부)	
금융개혁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금융위)	▪ 기술금융 개선방안(금융위)
경제혁신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국토부)	▪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미래부)
통일준비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관 1주년(통일부)	

□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를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 실시

- 매월 7~8개의 협업과제를 선정, 각 부처·공공기관 보유 매체에 게재함으로써 홍보콘텐츠의 파급력 제고

▪ 공무원 연금개혁(인사처)	TV광고 영상을 모니터, 전광판에 활용
▪ 노동개혁(고용부)	부처별 통화연결음, 동영상, 슬로건 등 3월부터 연중 홍보
▪ 정부3.0(행자부)	정부3.0 스티커 제작 배포(차량·도어용, 백드롭·포디움용), TV광고 영상을 민간전광판, 정부보유영상매체 통해 확산
▪ 맞춤형 복지(복지부)	부처별로 정책내용을 테마홍보 콘텐츠로 제작, 보유매체를 활용하여 통합홍보

- 보유매체의 적극적 활용 및 확대를 위해 월단위 실적 점검, 신규 매체 발굴 등 지속 추진

- \* 총 667종(TV, 라디오, 전광판 등 539종, 간행물 128종) 매체등록('15.12월 기준)
- \*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 ATM기기를 매체로 활용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 (기업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전국 ATM기기 16,000여대 활용)
- \* 전국 경찰관서·세무서 내 문자전광판, 지자체 관공서 전광판 협조 실시

□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제고 노력 강화

- 언론의 오보 등에 대해 해명자료를 신속히 배포하는 등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부 신뢰 제고

**문 제 점**

□ 매체별 적합한 콘텐츠 제작 노력 부족

- 일부 정책과제에 대한 홍보기획시 정책고객별로 차별화된 매체 선정 및 홍보콘텐츠 제작 노력 다소 미흡

- \* 매체별 특성(전광판:영상+문자, 모니터:문자 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필요

- 부처별 공감대 부족으로 심도있는 사전협의 부족
  - 정책발표 시점에 임박한 사전협의 요청 및 서면심의 대체 등으로 이슈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협의부족 사례 발생
-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대응 부족
  - 메르스 대응 초기 커뮤니케이션 오류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문제점 노출

## 개선·보완 방향

- 홍보기획 단계부터 매체를 고려한 정책홍보 콘텐츠 생산
  - 전광판·모니터·영상기기 등 송출 방식 다양화에 대응, 홍보기획 단계부터 매체를 고려한 콘텐츠 생성 필요
- 사전협의 확대 및 내실화 등 선제적 이슈 관리 강화
  -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대면협의 확대, 충분한 사전조율 등을 통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 및 공감대 조성
-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국가적 재난 등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보완 등 위기대응 홍보관리 강화
- 신뢰도가 높은 활용 가능 매체 발굴 확대
  - 전광판, 모니터 등 기존 매체의 효과적 활용 및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매체 발굴 노력 강화

## ② 국정과제 홍보성과

### 주요 정책성과

#### □ 기관장 언론홍보 활동 및 현장행보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방송출연, 인터뷰, 기고 등 언론홍보활동 및 정책현장설명회,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현장소통 노력 대폭 강화

##### [언론홍보활동 실적]

- 장관급 기관 : 월 7.0회 (전년 대비 133% 증가, '14년 3.0회)
- 차관급 기관 : 월 3.4회 (전년 대비 21.4% 증가, '14년 2.8회)

##### [현장소통활동 실적]

- 장관급 기관 : 월 15.3회 (전년 대비 56.1% 증가, '14년 9.8회)
- 차관급 기관 : 월 5.6회 (전년 대비 16.7% 증가, '14년 4.8회)

#### □ 4대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기획 홍보

- 전문가 기고, 칼럼, 기획보도 등을 통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로 우호적 여론조성 및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 공무원연금 개혁(인사처) : 공무원연금을 국가적 아젠다로 의제설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자유학기제 확산(교육부)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대상별로 최적화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산
- 노동개혁(고용부) :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노동 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설정·홍보, 개혁에 대한 호응도 제고
- 정부3.0(행자부) : 정부3.0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방송(KBS생생정보), 기획보도 등을 추진하여 정부3.0 인지도 제고

## □ 부처 SNS 활동 및 온라인홍보 활성화

- 주요 국정현안\* 홍보 관련 부처 협업체계 구축, 각 부처 SNS채널 연계 등을 통한 홍보콘텐츠 노출 확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대통령 순방행사 등

- 주요 계기별 공익캠페인·공동프로모션\*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편익 증진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

\* '쉽표정책' 등 대국민 서비스정책 온라인 캠페인 전개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활성화

- 카드뉴스,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등 온라인 특성에 적합한 비주얼콘텐츠 제작 확대

- 대국민 접점 홍보수단으로 SNS·방송·인터넷 등 활용 확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페이스북, 블로그 등 부처별 보유 홍보채널 적극 활용으로 콘텐츠 확산

- (복지부) '핑거밴드 캠페인'을 통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검지와 중지를 묶는 핑거밴드를 사용한 캠페인소재 차별화 및 청소년 대상 1인방송·웹툰 등을 활용(조회수 4,795만회 기록)

- (교육부) 청소년 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에 자유학기제, 학교 내 안전교육 등 주요정책을 간접홍보(PPL방식)하고, 수능모의고사 격려 포토툰 등 페이스 북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활성화(부처별 페이스북 순위 10→3위)

- (경찰청)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스토리펀딩을 활용한 국민참여문화 조성, 국민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지원 성과(후원액 5천7백만원 모금)

- 온라인 이슈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사전 협업홍보 강화

\* 온라인 모니터링 → 유언비어 등 대응 → 콘텐츠 확산 등 단계별 조치 체계화



## 문 제 점

- 온라인 활용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 PC에서 모바일로의 온라인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웹 운용 수준은 초기단계\*
    - \* 다수 부처에서 모바일 웹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화면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메뉴 구성, 지나치게 많은 텍스트 노출 등 부처별 수준 편차 존재
  - 빠른 전파력을 보이는 온라인 이슈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조치 필요
- 외신에 대한 적기 대응 및 내외신 연계 부족
  - 외신 오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국내홍보와 연계한 사전 홍보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다소 미흡

## 개선·보완 방향

- 모바일 플랫폼 최적화 콘텐츠 생산 등 온라인 환경대응 강화
  - 카드뉴스, 인터랙티브 기사 등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확대 추진
  -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등 적극 활용, 이슈 조기발굴 및 적기 대응
    - \* 부처별 정책과제에 대한 온라인 보도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보여주는 종합상황판 제공
- 국내외 홍보연계 및 적기 대응
  - 외신 모니터링 강화 및 국내외 홍보 연계체계 구축 추진
- 국민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정책홍보 강화
  - 정부부처·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자체 영상매체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고지서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적극 발굴·활용

## 4.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

###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정상화과제에 대한 추진성과 및 노력을 평가, 환류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확보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평가와 동일)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전문가 등으로 「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 구성·평가
- 평가지표
  - 기관별로 정상화과제 성과(70%), 정상화 노력도(30%)를 반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상화과제 성과	• 과제선정·계획 충실도, 계획이행도, 성과달성도, 국민만족도	70
정상화 노력도	• 정상화 참여·실천, 언론 홍보 등 국민소통·확산	30

\* 100점 만점 평가후 10점으로 전환

### 2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미래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보통	기재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 안전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미흡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여가부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 '15년 중점 추진사항

- 정상화 효과가 큰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
- 민생관련 집중관리과제\*에 대한 민관합동TF 구성, 이행상황 점검·제도개선 등으로 성과 체감도 제고

\* 보이스 피싱 근절, TV홈쇼핑 불합리 관행개선,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 □ 주요 성과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절감 등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어린이집 부정수급 근절 대책 내실화, 농업 난방용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등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 대폭 축소
- 대·중소협력사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결제관행 개선, 홈쇼핑 납품거래 안정성 강화 등 시장질서 정상화
-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를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방지, 이동 통신요금 할인 확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불합리 개선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일부과제는 부처 개별적 제도개선에 치중하여 성과창출 속도 미흡, 관계부처 간 실질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입법 노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등 지연과제에 대한 대책마련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화 홍보 추진

## 4 분야별 평가결과

### (1) 공공부문 개혁

#### 주요 정책성과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추진
  - 부채감축 대상기관(39개) 부채 13조원 감소(510.6→497.6조), 부채비율 6.0%p 개선(222→216%) 등을 통한 국가 신용등급 상향\*
    - \* Moody's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15.4월) 및 등급상향('15.12월)
  - 유사·중복 기능조정, 공기업부채 감축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및 민간경제 위축 우려 사업\*\*의 민간이양 추진
    - \* ▲지방공기업 부채 감소('13년 73.9→'14년 73.6조원) ▲지방공기업 통·폐합(21→8개) ▲부채비율 매년 10%p씩 감축('14년 150→'17년 120%)
    - \*\* 16개 지방공기업의 온천, 목욕탕, 골프장, 래프팅장, 호텔, 편의점 등 23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
  - 319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목표 230개)하여 '16년 예산에 반영, 5,480억원 재정 절감 등 재정효율화
- 공공기관 민원회피 행태 개선
  - 3회 이상 기관간 반복이송 민원(평풍민원) 38,500건을 신속히 조정, 평균 접수기간을 단축하여 공공기관의 민원회피 행태 개선
    - \* 평균 접수기간 추이 : ('15.3월) 4.75 → ('15.12월) 2.37일

## 문 제 점

-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논란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기준'과 관련한 농축산업계의 반발 등 논란 지속
  
- 기상 장비구매 관련 투명성 확보 미흡
  - 기상장비 구매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찰 비리 발생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 5천만원 이상 기상장비 구매액 : ('14) 120억 → ('15) 196억,  
기상장비 입찰비리 직원 등 2명 불구속 기소('15.10월)

## 개선·보완 방향

- 「부정청탁 금지법」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강화
  -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기준 마련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후속조치 조속 추진
  
- 기상 관련 장비구매 투명성 확보
  - 기상장비 구매절차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기상장비 도입 체계 투명성 강화대책 마련

## (2) 법질서 바로 세우기

### 주요 정책성과

#### □ 보조금 부정수급 적극 단속을 통한 재정누수 최소화

- 국가보조금 비리사범 단속실적 전년대비 147% 증가\* 및 보조금 관리·감독 기관에 부정 수급액 약 840억원 환수 조치 통보

\* 보조금 비리사범 1,306명 기소, 243명 구속, 부정수급액 3,486억원 적발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실효성 강화\* 및 농업 난방용 면세유 중 경유를 제외하여 약 5천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효과

\* 명단공표 의무화,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자격정지(1년)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15.9월 시행)

#### □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15.7.24. 공포, '16.1.25. 시행)

\* 신고대상 법률 확대(180→279개), 특별보호조치 신설 및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등

####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불법행위 단속강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사행성 게임장 등 적극 단속·검거

\* ▲ 조직폭력배 3,160명(전년 대비 74.3% ↑) ▲ 사이버금융사기 10,917명(전년 대비 27.3% ↑)

▲ 전화금융사기 16,180명(전년대비 159.0% ↑) ▲ 사행성게임장 8,886건(전년 대비 3.0% ↑)

-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 등으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감소 추세('15.3월 1,002건→'15.12월 291건)

## 문 제 점

### □ 친환경 제품의 허위·과장광고 심각

- 친환경 표시·광고 제품 모니터링(500건) 결과, 상당수 위장제품이 확인(63건)되었고, 특히 가구업계의 허위·과장광고가 심각\*

\* 가구유통 최저조건을 친환경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최다(총 63건중 46건)

### □ 범죄수의 미납추징금 집행률 감소 추세 지속

- 제3자 명의 은닉재산 추징절차의 복잡성\*으로 미납추징금 환수에 애로\*\*

\*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범인의 소유로 회복한 후 범인을 상대로 추징 가능

\*\* 추징금 집행률(김우중 제외, %) : ('12) 5.49 → ('13) 4.24 → ('14) 3.47 → ('15) 2.09

### □ 불법폐수 배출 관행 근절 미흡

- 폐수배출 오염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임의 조작 사례 발생('15년 2건), 한국환경공단의 감시기구로서 역할 미약

## 개선·보완 방향

### □ 친환경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관계부처(환경부·공정위 등) 협업을 통해 친환경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범죄수의 미납추징금 환수노력 강화

- 관계기관간 미납 추징금 환수TF 구성, 미납 추징금 집행 강화를 통한 추징금 환수 실적 개선

### □ 불법폐수 배출 관련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관리 강화

- 지속적 지도점검 강화 및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3]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 주요 정책성과

##### □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불합리 개선

- 자동차 토털이력정보시스템 구축('15.10월)을 통해 차량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중고차 구매자들의 피해 사전예방
-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용자간 차별 해소 및 요금할인제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확대
  - \* 요금할인율 상향(12 → 20%, '15.4월)으로 요금할인제 누적 가입자 대폭 증가 : ('14.10월) 3만 → ('15.12월) 438만명

##### □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정상화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중소협력사간 결제관행을 개선, 2·3차 협력사의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
  - \*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3차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으로 현금화('15년 70,344개 기업 참여, 19조 3,471억원 거래)
-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그 결과를 홈쇼핑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납품업체의 거래안정성 제고
  - \* 6개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3억여원 부과('15.4월)
  - \*\* 일부 홈쇼핑사 재승인 기간 단축(5→3년), 부당 수수료 전가 금지 등 의무부과 및 불이행시 제재 등
- 불합리한 역진적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산정·부과방식을 개선\*,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로 형평성 제고
  - \* 영업정지 1일 해당 과징금(연매출액 400억원 초과시) : 220만원 → 1,381만원



## 문 제 점

### □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 증대

- 금융,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 국민 불안감 증대

\* 공공아이핀시스템 해킹으로 75만건 아이핀 부정발급('15.3월), 온라인 커뮤니티 '뽀뿌' 해킹으로 190만건 개인정보 유출('15.9월) 등

### □ 대포통장 관련 범죄 증가

- 취업 등을 미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포통장 범죄 증가

\* 20대 명의 대포통장 개수(비율) : ('12) 1,261(7%) → ('13) 2,450(14%) → ('14) 8,702(19%) → ('15.7월) 6,853(28%)

### □ 일용 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율 준수 제도개선 미흡

- 소개요금 법정비율(임금의 4%이하) 준수\*여부 모니터링 미흡 및 법정 비율 위반자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지연

\* 직업소개소 요금표에 소개요금 표기 의무화(「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15.5월)

## 개선·보완 방향

###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탐지·삭제 등 사후대응 강화

### □ 적발된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금융교육 확대, 온라인 통장 거래 방지 방안 등 대포통장 확산 방지대책 마련

### □ 법정 소개요금의 현장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등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업안정법」 개정 조속 완료

## [4] 국민안전 확보

### 주요 정책성과

#### □ 국가기관 헬기 통합운영체계 구축

- 국가기관 헬기\* 공동 활용 표준운영절차 마련·시행('15.7월)으로 긴급 상황시 국가헬기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

\* 국가기관 헬기 137대(안전처 20, 경찰청 19, 산림청 45, 지자체 소방헬기 24, 군 29)

- 통합운영체계 가동을 위한 통합훈련 실시('15.10월, 2회)

####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엄정 단속

- 중대위반(영해침범, 폭력저항)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단속 및 엄정 처벌로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중대위반행위 감소

\* 불법 중국어선 나포 척수 : ('14) 341 → ('15) 568척 (66.5% ↑)

\* 중대위반 중국어선 비율 : ('14) 38 → ('15) 24% (14%p ↓)

#### □ 긴급신고 전화 통합 확정

- 긴급 신고전화를 현행 20여개에서 3개(재난119, 범죄112, 민원110)로 통합하는 방안 확정('15.1월)

#### □ 생활안전정보 통합 및 공개

- 분산 관리되고 있는 생활안전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별 안전지수(지자체 안전수준 비교)'와 '생활안전지도'로 통합·공개

\* 지역안전지수 공개('15.11월) 및 생활안전지도 115개 시·군·구 공개('15.1월), 229개 시·군·구 공개('16.1월)

## 문 제 점

### □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 증가

- 순대, 떡볶이 떡 등 서민 기호식품에서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례\* 지속 발생

\* '15.2월 깨진계란, '15.7월 대장균 떡볶이 떡 유통 등 적발

- 가짜백수오 사건 계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 확산\* 및 식품안전 감독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 소비자 74.5%가 '백수오 사건이 향후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소비자시민모임, '15.11월)

### □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조

-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국민의 절반이상이 원전안전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지속

\* 원전안전 신뢰도(원자력안전 문화재단 조사) : ('14.11월) 26.2 → ('15.12월) 41%

## 개선·보완 방향

### □ 식품안전 감독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서민 기호식품식품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 및 식품안전 취약 식품에 대한 점검 강화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재료 검사확인 의무 신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불신 해소

### □ 원전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 대책 수립·추진

-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지속, 객관적인 정보제공 등 대책 마련

## 5. 기관공통사항 평가

### (1) 정부 3.0

#### 가.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 가시화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전략수립에 반영

#####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평가와 동일)

##### □ 평가방법

- 행자부 주관, 「정부3.0 평가지원단」 구성\*, 평가

\* 학계 및 컨설턴트, 연구원 등 48명 위촉(중앙행정기관 분과위원회 28명)

##### □ 평가지표 (10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추진역량	• 정부3.0 변화관리 실적	정성	12점
	•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 실적	정성	8점
중점과제 성과	• 국민 맞춤 서비스, 공공 서비스목록 현행화 실적	정성/ 정량	34점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활용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실적	정성/ 정량	16점
	•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공개율	정성/ 정량	14점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지원 실적	정성	16점

※ 100점 만점 평가후 ±5점으로 전환

## 나. 총 평

### □ 주요 성과

- (추진 역량) 정부3.0 홍보·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전파 등 변화 관리 부문 역량 강화
- (서비스 정부)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구현에 기여
  - \* 해외여행정보 투어패스 서비스 등 국민참여형 정책 확산,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판매지원 등 수요자분석·타겟팅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추진 등
- (유능한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공유·시스템 연계 등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 \* 대학과의 협업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전환,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 감축 등
- (투명한 정부) 주요 정책·통계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사후관리로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데이터 활용 지원 활성화
  -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달성('15.6월), 사전정보공표건수(건) : ('14)13,548 → ('15)23,272, 원문정보공개율(%) : ('14)32.6 → ('15)48.6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관행 잔존 및 정보공유·협업 성과가 일부 기관에 한정
  - 국민시각의 서비스 제공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개선 필요
-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노력은 인정되나 창업 등 실질적 가치창출과 연계된 성과는 부족
  - 국민이 원하는 정보공개·데이터 활용지원 가속화를 통해 대국민 성과체감도 제고

## 다. 분야별 평가결과

### ① 추진역량

#### 주요 정책성과

#### □ 다양한 매체와 홍보방법의 활용으로 정부3.0 추진 파급력 제고

- 정부3.0 홍보협의회·부처간 공동 홍보 등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노력

- TV프로그램(KBS 생생정보 : 12개 기관) 방영 및 주요 언론 기획보도 등 통합 홍보
- 국세청, 식약처 등 : 정부3.0위원회와 합동브리핑, 국무회의 보고 및 공동보도
- 경찰청, 국토부 : 보유매체 활용(외벽광고, 전광판 등), 특허청 : 서포터즈 거리홍보 등

#### □ 정부3.0 가치의 착근을 위한 기관별 내부교육 실시

- 정부3.0 교육계획 수립 및 참여도 제고 노력, 교육성과 분석 등 실시

- 농식품부 : 해당기관에 특화된 정부3.0 교육 실시, 교육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실시
- 경찰청 : 자체 교육교재 개발을 통한 기관별 정부3.0 추진전략 모색 및 학습

#### □ 상호학습·벤치마킹을 통한 정부3.0 정책 우수사례 확산노력

- 정부3.0 우수사례 핵심전략에 대한 표준매뉴얼 제작 및 학습 확산

- 교육부 : 고용부의 워크넷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대학입학정보 포털 개선
- 중기청 : 중소기업 상담 1357 통합콜센터 사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노하우를 전파, 1379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미래부),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서비스(코트라) 개발지원

#### 문 제 점

#### □ 홍보·교육 및 정책품질관리 시행의 실효성 부족

- 일부기관의 경우, 당연히 수행하는 홍보·교육 등을 형식적으로 정부3.0에 반영하여 추진효과에 한계

#### 개선·보완 방향

#### □ 정부3.0과의 연계성을 높인 홍보·교육 및 정책품질관리 강화

- 정부3.0 가치에 입각한 벤치마킹 등 기관별 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정부 전반의 정부3.0 변화관리 역량 제고

## ② 서비스 정부

### 주요 정책성과

#### □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채널 다변화와 참여증대

- 국민디자인단, 인터넷 기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등의 활용으로 참여의 지평을 확장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쌍방향성·정교성 획득

< 참여채널 다변화 우수사례(예시) >

- 농식품부 :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SNS에 게시하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기술컨설팅 제공
- 통계청 :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구성,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안과 실천

- 쉽고 편리해 즐겨 이용하게 되는 신개념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

< 국민 생활 가치 제고 우수사례(예시) >

- 농식품부 : 전국 행정리 중 버스 미운행 지역과 일일 10회 미만 운행지역이 전체의 43%라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개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행자부 : 개인별 생활정보 21종을 민원24 단일 창구에서 통합 서비스하여 생활정보 만족도 상승('14년 74.1→'15년 78.4), 비용절감 달성(고지서 우편발송비용 1,579억원)

- 자원을 연결하고 통합하여 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 유통, 광고, 무역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

< 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 우수사례(예시) >

- 중기청 : 창조혁신제품 발굴·검증·DB화하여 다양한 유통채널들에 상품기획 제안, '아임쇼핑' 매장을 통해 판매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지원
- 방통위 : 기술은 있으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성공사례 도출
- 관세청 : 우리 기업의 역직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업체 수출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수출신고 간소화, 배송비 절감 등을 통해 역직구 수출액 1,500억원 달성

## 문 제 점

### □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개발에 집중할 필요

- 서비스개발 과정에서 수요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심화되어야 함

< 수요자 심화분석이 필요한 사례(예시) >

- (국토부- 건축물 정보 민간 개방 사례) 수요자 의견수렴 등 심화 조사분석 필요
- (공정위- 소비자 정보제공 서비스 사례) 가격·품질 비교정보, 유통 채널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정보 선정과 생성과정에서 수요자참여와 의견수렴 부족

### □ 서비스 추진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사후관리 부족

- 다수 기관이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필요

## 개선·보완 방향

### □ 국민이 원하는 핵심업무 중심 대표 서비스 개발에 역량 집중

- 각 부처의 해당 업무에서 정부3.0의 방향과 맞춤형 서비스 개념에 충실한 브랜드 서비스 과제의 개발을 위한 재원 및 인력 투자
  - \* 업무범위와 역량을 감안하여(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각 부처의 핵심 업무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 과제의 개발 및 추진

### □ 서비스 사후 품질관리 및 지속적 성과관리 체계 개선

- 서비스의 대상별 정부3.0 추진 이후 달라진 부분을 종합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추가 서비스를 진행
- 대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행계획 대비 달성도 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평가 필요
  - 성과 가시화를 위해 국민관점에서 지표 설계 추진



### ③ 유능한 정부

#### 주요 정책성과

#### □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 등 디지털 협업을 통한 일부 성과창출

- 기존 개별기관 중심의 업무처리에서 유관 기관간 MOU 체결 등 협업을 통한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통합의 성과 창출

\* 기관간 협업으로 국민편의성 향상, 행정비용 절감 등 사례발생

< 기관간 협업 우수사례(예시) >

- 경찰청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금융제도 개선, 국제 공조수사 추진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발생 건수 72% 감소, 피해액 52% 감소('15.10) 실적을 거둠
- 보건처 : 국가유공자 생활수준 조사 시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공적자료)14일→3일/(금융정보)30일→14일), 38억원 예산절감 효과

####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및 조직문화 변화

- 형식적 보고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업무몰입도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 개선

\*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의 업무 환경조성 강조

< 일하는 방식개선 우수 사례(예시) >

- 행자부 :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이용인원 확대('14년 90명 → '15년 525명),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절감 등의 성과창출
-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시 전수 방문조사방식을 탈피, 13개 기관·400여 대학과 협업으로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민편의 증진·예산절감·통계품질 제고

- 정부통합의사소통 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효율적 업무 추진

- '14년 대비 영상회의 3.5배, 메모보고 3.8배로 크게 증가

\* 영상회의 건수(건) : ('14) 17,232 → ('15) 61,925

기관 간 메모보고 건수(건) : ('14) 18,196 → ('15) 70,459

## 문 제 점

### □ 많은 기관이 아직 투입 중심 성과에 국한

- 실질적인 파급효과 중심이 아닌, 업무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제도도입 중심 과제 운영하는 사례 다수

< 최종성과물 제시가 필요한 사례(예시) >

- (문체부 : 부서별 핵심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보관소 구축·운영) 핵심지식 225건 등록완료 등의 계량적 성과에 그쳐 활용효과 등의 최종성과를 유도할 필요
- (금융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2,295건의 관행·제도개선 접수 등의 계량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국민편의성 향상 및 비용절감의 최종성과물이 보이지 않음

### □ 기존 정책의 연장에 그쳐,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부족

- 일부 기관은 단순 사업, 프로그램 실시 등을 성과로 제시

< 단순사업을 성과로 제시한 사례(예시) >

- (국민안전처 : 3개 부처 통합에 따른 조직융합 프로그램 마련·시행) 이질적 부처간 통합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인정되나 창의적 발상 전환으로 보기 어려움
- (원자력안전위원회 : 지자체협업을 통한 방사능방재훈련) 기관의 당연 수행 사업 성격이 강함

## 개선·보완 방향

### □ 투입 중심이 아닌, 파급효과 중심의 노력 필요

- '국민관점에서의 편의성 향상 효과', '비용절감', '재정 건전성 기여 효과' 등 최종성과물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추진

- 파급효과 중심의 성과목표 설정 및 단계적 추진

### □ 기존의 업무관행 개선을 넘어서는 혁신적 사고 전환

- 약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업수행 내용 및 방식상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

- 다양한 아이디어 실천을 통해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행태변화 유도

## ④ 투명한 정부

### 주요 정책성과

#### □ 정보공개 범위의 대폭 확대로 국민 알권리 및 투명성 제고

- 주요 정책·통계 등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원문정보공개율 48.6%로 정부투명성 향상에 기여

\* 원문정보공개율(%) : ('14) 32.6 → ('15) 48.6

####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적시공표

\* 사전정보공표 건수 : 23,272건(기관별 약 554건의 사전정보공표)

#### □ 민간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창업 활성화 지원

- 국민이 선정한 대용량 데이터\* 개방과 함께 민간 활용이 용이한 오픈 포맷 비중\*\* 대폭 확대

\*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11개 분야) : 농축산물가격정보(농식품부), 상권정보(중기청), 교통사고정보(경찰청) 등

\*\* 오픈포맷(CSV, XML 등) : ('14) 8.8 → ('15) 50.8%

<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 우수사례(예시) >

- 농식품부 : 39개(농협, 도매시장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는 농축산물가격정보 약 11만건 통합 개방
- 중기청 : 11개 기관(한국감정원, SK플래닛 등)이 보유한 상권정보 약 200만건 통합 개방

- 양질의 데이터 개방과 함께 창업 컨설팅, 창업공간지원 등 다각도의 창업지원 노력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한 사례 창출

\* 신규 서비스(앱 등) 개발 증가(누적) : ('14) 395 → ('15) 674개

< 데이터활용 및 지원 우수사례(예시) >

- 해수부 : 연안 포락지 정보 추가발굴, 해양정보 제공을 위한 「연안포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소형선박용 내비게이션 “**船내비**” 제작 지원
- 경찰청 : 서비스 수혜자 설문조사·인터뷰, 교통DB 정비 등을 통해 무단횡단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사고 등 **교통사고 정보 6종을 오픈 API로 개방, 창업지원 협의회 등 개최**

## 문 제 점

- 국민이 원하는 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추가발굴 필요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품질을 갖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개방이 일부 부족
- 데이터 활용 및 창업지원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많은 기관에서 데이터 활용경진대회 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 필요

## 개선·보완 방향

- 내실 있는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공개·데이터 발굴
  - 국민이 원하는 핵심정보 심층조사, 국민의 개방 데이터 선정 및 참여 절차를 통해 국민수요 중심의 선제적인 개방
    - \* 국방·교통·재정정보 등 국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노력
  - 공공 데이터의 개념에 입각하여, 향후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데이터 발굴 노력 지속
    - 국민이 관심 높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방 확대 유도
- 데이터 활용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지속적 지원
  - 민관협업 및 부처협업을 통하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창업 단계별 상시 지원 실시
    - 창업지원공간 운영 활성화, 기업매칭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 추진

## [2] 부처간 협업

### 가.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부처간 협업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계기관간 협업 활성화 및 국정과제 등의 성과 제고

#### □ 평가대상 : 41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장관급 (22개)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안전처
차관급 (19개)	인사처,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

\* 국정과제 협업과제가 없는 새만금청은 결측처리

#### □ 평가방법

- (국정과제 이행성과) 국정과제 협업과제의 부처별 이행성과 반영(±2점)
  - \*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동 집계
- (우수·미흡사례) 국무조정실의 '15년도 부처간 협업과제(47개) 추진 결과, 우수·미흡사례(±1점) 평정점 반영
  - \* 민간 평가단(10명)을 구성하여 평가

####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배점
국정과제 이행성과	• 협업부처로 참여한 국정과제의 이행성과 (협업과제의 집행이행도 + 성과지표달성도)	정량	±2점
협업우수·미흡사례	• 협업 우수·미흡사례 가·감점	정성	±1점

## 나. 총 평

### □ 주요 성과

- 컨트롤타워 중심의 공고한 협업체계를 통해 집약적 성과 창출
  -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해, 협업 참여기관 간에 자원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완수
  - \* 고용복지+센터의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고용부·복지부·행자부 등 협업기관별 지원방안을 마련, '15년 개소목표 달성(30개소)
-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한 분야에서 높은 체감성과 창출
  - \*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구축,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사회적 이슈 발생시, 문제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초동 협업체계\* 강화
  - \* 주요 이슈 발생시, 컨트롤타워 중심의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 부처간 엇박자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정책공조를 강화(One-Voice) 하고 정책 이견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
  - \* 협업의 정책효과가 큰 과제(핵심과제) 및 다수부처 연관과제(조정과제)를 협업과제로 선정, 국조실에서 직접 관리
- 공직사회 협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협업 친화적 여건 지속 조성

## 다. 평가결과

### 주요 정책성과

- 관계기관 협의체 등 협업체계를 마련, 집약적 성과 창출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협의체(기재부 차관 주재)를 구성,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12월)
  - 메르스 초기의 혼란 극복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범정부 대책 회의, 총리주재)를 조직, 통일된 상황수습을 주도
    - \* 매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실시, 조치 필요사항 현장중심 대응
  
- 부처별 보유 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
  - 고용복지+센터 확산을 위해 협업기관별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및 설득노력 등을 통해, '15년도 목표(30개소 개소) 달성
    - \* 고용부(예산지원, 평가가점), 행자부(인사평가 가점), 여가부(관련인력 추가배정)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관들이 소관부처 주요 사업·기능들을 혁신센터에 연계하여 同 센터의 성과 및 가치를 높이는데 공동 기여
    - \* 고용부(고용존 운영), 산업부(스마트공장 사업 연계), 문체부(문화창조융합 벨트 연계), 중기청(기술창업프로그램 사업 연계) 등
  
- 통합지원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서 높은 체감성과
  - 정보공유 통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익 증진
    - \*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신검정보 공유) 등
  - 관계기관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 \* 商團形 협업 통한 해외수출 지원, 해외 한국상표 보호 지원 등

## 문 제 점

### □ 이슈발생 초기 대응 부진이 문제를 심화

- 메르스 발생 초기, 주관부처의 정책 혼선\* 및 관계부처와의 소통 부진\*\*으로 국민적 혼란 심화

\* 메르스 발생 병원에 대한 공개 지연, 병실 및 자가 격리자 관리 부실 등

\*\* 사태 초기, 학교 휴업조치에 대해 교육부·복지부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 하면서 국민 혼란 가중(교육부 : 휴교 필요 ↔ 복지부 : 불필요)

### □ 부처간 엇박자가 정책 신뢰도를 추락

- 정부 유관기관 간 상반된 조사결과 발표가 국민혼란을 가중

\* 식약처와 소보원은 백수오(4월), 모기기피제 유해성(8월)에 대해 상반된 결과 발표

-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정책발표가 정부 신뢰도를 저하

\* ‘국적 크루즈선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 방침’을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15.5) 했다가 관계부처(문체부) 반대로 논의 중단

### □ 이해관계 충돌분야에서 고질적 협업 장애

- 부처간 협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는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협업은 그 만큼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

\* 협업 필요성은 높게 인식(4.6/5점), ‘협업이 잘된다(3.6/5점)’는 상대적 저조('15.12월)

- 특히, 부처간 본질적 이해관계 충돌 시 협업에 애로

\* 민간조사원(사립탐정) 감독(법무부↔경찰청), 의료기기산업 육성(산업↔복지부) 등

### □ 민간참여 확대 등 협업문화 개선 필요

- 행정변화에 따라, 민관협업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민간의 협업참여 비중과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

\* 현재는 주로 전문가 회의 참여, 협의회 위원 등에 참여하는 수준



## 개선·보안 방향

### □ 초기 단계 선제적 협업 기능 강화 필요

- 협업 초기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범정부 공동대응이 필요한 주요 이슈 발생시, 구심적 협업체계 조기 가동

\* 부처간 공동목표 설정, 기능분담 등 초기단계 이견에 대한 조정·지원 강화 등

- 협업수요가 발생한 국정과제는 시의성 있게 협업과제로 관리, 관계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

\* (예) 임금피크제를 국정과제 협업과제로 추가('15.8월), 적극적 과제추진 유도

### □ 부처간 정책공조 및 소통채널 활성화 필요

- 부처간 이견이 잦은 분야는 상시 협업채널 운영\*을 활성화

\* (예) 환경관련 법령안에 대한 '환경↔산업부간 협의체' 운영 등

- 주요 정책 발표시 사전협의 등 정책공조 강화(One-Voice 유지)

\* 식약처-소지자원 간 '국민안전 관련 사항은 발표전 협의' 키로 MOU 체결(12.28)

### □ 중요 협업과제는 국조실이 직접 관리

- 신규 서비스 창출 등 협업 체감도가 높거나(핵심과제), 부처간 협력·조정이 필요한 과제(조정과제\*)는 국조실 협업과제로 직접 관리

\* 부처간 장기 이견과제 조정을 중점 추진, 높은 수준의 협업 선례 축적

- 필요한 경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견 신속 조정

### □ 민관협업 활성화 등 협업문화 확산 필요

- 정책단계별 민간 참여 확대 등 민·관 협업은 활성화하고, 협업 친화적 환경\* 지속 조성

\* 부처간 정보공유·소통 확대, 협업성과에 대한 유인체계 강화(信賞必罰) 등

우수 사례

① 공고한 협업체계 운영을 통해 공동의 성과 창출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확산)** 관계부처 합동협의회(기재부차관 위원장)를 구성('15.6월), 부처별 역할분담 및 실적점검을 통해 성과 달성('15.6월 1개→12월 313개)
  - \* 기재부(총괄, 별도정원 확정), 고용부(지원금 제도개선), 주무부처(현장지원 등)
- **(청년 해외진출 지원)**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15.3), 유사사업 통합(26개→22개) 등 기능 효율화 및 관련 지원체계 구축
  - \* 해외통합정보망 구축('15.5),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마련('15.11) 등

② 관계기관 정보공유로 국민편익 증진 및 업무효율화

-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행자부·국토부·금융위 등 정보공유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15.7)
-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건강보험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이 건강검진 정보(시력·청력)를 공유하여, 신체검사 없이도 면허발급 및 갱신 가능
- **(유해물질 검사 효율화)** 환경부·관세청간 통관단계 협업검사 강화,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단속 효율성 제고(총 1,264건 협업검사, 유해화학물질 8,454톤 적발)

③ 대국민 통합 지원서비스 창출

- **(商團形 협업체계)** 정부와 국내 IT기업이 상단형 민관협업체계를 구축,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의 최대 규모(2,700억원) 아프리카 수출 성과
  - \* 관세청, 기재부, 외교부, KOTRA, 수출입은행, 국내IT업체 등이 협업체계 구성
- **(K-브랜드 보호 통합지원)** 해외에서의 한국상표의 무단 선등록, 모조품유통 등 피해 보호를 위해, 특허청·외교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통합지원체계 구축
  - \* 특허청(총괄), 외교부(재외공관 협조), 관세청(모조품 국경단속), KOTRA(현지 데스크운영) 등
- **(농촌시설 패키지 지원)** 농촌 유희시설을 고령자 통합지원시설로 리모델링
  - \* 농식품부(시설조성 총괄), 복지부·문체부(복지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 미흡 사례

### ① 이슈 초기단계 협업 미흡

- **(메르스 대응)** 발생 초기단계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훈선 및 방역체계 부실, 관계기관간 소통부진\* 등이 사태를 급속히 확산
  - \* 병원정보 공개 훈선, 학교 휴업실시 관련 이견(교육부 : 필요↔복지부 : 불필요) 등
- **(가뭄 대응)** 물관리 부처가 여러 부처에 칸막이 식으로 분산\*되어, 장기간의 극심한 가뭄 대응에 한계\*\* 노정(☞총리실 산하 물관리협의회 설치, '15.9월)
  - \* 광역상수도·공업용수(국토부), 지방상수도(환경부), 농업용수(농식품부) 등
  - \*\* 물관리 정보에 대한 공유 제한, 소관부처간 협업 부진 등으로 통일된 물관리 한계

### ② 부처간 엇박자로 인한 정책신뢰도 저하

- **(국적 크루즈선 내국인 출입 허용)** 해수부가 '내국인 출입 허용' 정책을 발표('15.5월) 했다가, 관계부처(문체부) 반대로 논의 중단
- **(정책공조 미흡)**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사건('15.4월), 모기기피제의 유해성\*('15.8월) 조사결과에 대해 각각 상반된 결과를 발표
  - \* 모기기피제 안전성 문제 없음(식약처) ↔ 해외 사용금지 성분 검출 발표후 번복(소비자원)

### ③ 부처간 업무영역 갈등

- **(민간조사원 감독)** 신직업(탐정)의 감독권한에 대해 법무부·경찰청 이견
  - \* (법무부) 조사원의 행위가 준사법적 행위인 점 등을 감안, 법무부 관할
  - \* (경찰청) 경비업 등 유사직업 관리 등을 감안, 경찰청 관할
-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복지부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포함된 법률 제정에 대해 '산업' 주관부처(산업부)에서 반대
  - \* 기존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약·의료기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로 명칭 변경 추진(복지부)

### (3) 특정시책

#### 가.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행성과 제고

##### □ 평가대상 : 42개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평가와 동일)

##### □ 평가방법 : 시책 주관부처가 정량적으로 평가

- \* 장애인고용(고용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복지부),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구매(중기청)

##### □ 평가지표 (±2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장애인 고용	○ 법정 의무고용률(3%) 중심 가감점	±0.6점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1%) 중심 가감점	±0.6점
3. 중소기업 제품 구매	○ 법정 의무 구매비율(50%) 중심 가감점	±0.6점
4. 기술개발 제품 구매	○ 법정 권장 구매비율(10%) 중심 가감점	±0.2점

## 나. 총 평

### □ 주요 성과

- (장애인 고용) **소 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법정기준 달성기관도 전년 보다 증가**
  - \* 장애인 고용률(%) : ('13) 3.45 → ('14) 3.27 → ('15) 3.36
  - \* 법정비율 달성기관(개) : ('14) 35 → ('15) 39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평균 구매율(1.12%)이 전년 대비 상승, 법정기준(1%)을 상회하고, 법정기준 달성 기관수도 증가**
  - \* 평균 구매율(%/억원) : ('14) 0.97 / 563 → ('15) 1.12 / 708
  - \* 법정비율 달성기관(개) : ('14) 21 → ('15) 25
-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 **중소기업 제품(법정 50%) 및 기술개발제품(법정 10%)의 구매 실적도 전년대비 상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조원) : ('14) 64.7 / 11.1 → ('15) 66.7 / 12.2
  -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억원) : ('14) 9.7 / 3,660 → ('15) 11.8 / 5,023

###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평균 구매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
    -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법정 1%) : 17개 기관 미달(총 42개 중)
    - \* 기술개발제품 구매(법정 10%) : 13개 기관 미달(총 42개 중)
- ⇒ **공공기관 제품 구매의 편의성 제고\***, **제품의 품질개선 및 판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구매 확대 유도
- \*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을 개통('16.1월 이후), 접근성 개선 예정
  - \*\* 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16년 설치), 대규모 구매 수요(국책사업 등) 발생시,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협조 지원 등

## 다. 분야별 평가결과

### ① 장애인고용 (법정 고용률 3% 이상)

#### 주요 정책성과

- **쏠 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의무고용률(3%)을 달성한 기관 수\*\*도 증가**

\* 장애인 고용률(%) : ('13) 3.45 → ('14) 3.27 → ('15) 3.36

\*\* 의무고용률 달성기관(개) : ('14) 35 → ('15) 39

-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4%이상) : 국가보훈처(5.85%), 조달청(5.13%), 법무부(4.94%), 국세청(4.84%) 등 14개 기관
- 실적 개선 기관 : 미래부(2.85→3.19%), 방통위(2.84→4.11%), 새만금청(3.13→4.80%)

#### 문제점

- 전반적인 장애인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도 일부 존재

\* 교육부(2.0%, 일반직), 국방부(2.7%, 군무원), 경찰청(2.94%, 일반직)

#### 개선·보완 방향

-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정직렬\*의 경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장애인 구분 모집, 자격요건 완화 등 채용 확대방안 강구

\* 경찰청 일반직, 국방부 군무직, 교육부 일반직 등

- 의무고용률 달성 기관의 경우에도, 사회적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중증장애인의 채용 확대 노력 필요

\* 의무고용률 달성기관(38개) 중 중증장애인 채용기관은 19개 기관에 불과

## ②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구매비율 1% 이상)

### 주요 성과

- 전체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율\* 상승, 법정 구매율(1%) 충족 기관 수\*\*도 증가

\* 평균 구매율(%/억원) : ('14) 0.97 / 563 → ('15) 1.12 / 708

\*\* 의무고용률 달성기관(개) : ('14) 21 → ('15) 25

- 법제처(2.52%), 식약처(2.27%), 방사청(1.97%) 등 25개 기관이 법정구매율 초과
- 문화재청(0.78→1.10%), 경찰청(0.61→1.05%) 등 5개 기관은 법정비율 미달('14년)에서 초과('15년)로 전환

### 문제점

-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비율\*이 여전히 높고, 전년 대비 실적 감소기관도 13개 기관\*\*에 달하는 등 시책준수율이 저조

\* 법정구매율 미달 기관(개) : ('14) 21 → ('15) 17

\*\* 금융위(△51.9%), 통계청(△35.6%), 권익위(△22.3%) 등 13개 기관 실적 감소

### 개선·보완 방향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물품·용역 계약 편의제도\*' 활용률 제고, 공공기관 구매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구매율 제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한 수의계약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쇼핑몰을 개통('16.1월), 공공기관 접근성 제고 예정

- 주관부처(복지부)의 구매실적 점검·독려를 통해 실적 지속 개선

### ③ 중소기업 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50% 이상)

#### 주요 성과

- 중소기업 제품의 평균 구매율(66.7%)이 법정비율(50%)를 크게 상회하고, 대부분 기관(39/42개기관)이 법정비율 달성

\* 중기제품 구매액(구매율) : ('14) 11.1조원(64.7%) → ('15) 12.2조원(66.7%)

- 부처의 자구노력\*을 통해 높은 구매율을 달성한 기관이 증가\*\*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 확산

\* 부처 내부평가 성과지표 반영, 정기 실적점검 회의 개최 등

\*\* 방통위(95.6%), 보훈처(89.4%), 인사처(88.1%) 9개 기관이 85%이상 달성

- 방통위 : 중기제품구매가 부진했던 품목을 분석하여 해당품목을 중기제품으로 구매, 대상기관 중 가장 높은 구매율(95.6%) 달성(전년대비 5.6%p 증가)
- 인사처 :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과별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물품구매시 중기제품 여부 확인 등 내부절차를 마련하여 높은 구매율(88.2%) 달성

#### 문제점

- 전년 대비 평균 구매율은 상승(64.8→66.7%)했으나, 전년 대비 실적 감소 기관도 16개 기관\*에 달해 정부 부처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

\* 복지부(△21.2%), 통계청(△21.1%), 공정위(△18.5%) 등 16개 기관 실적 감소

#### 개선·보완방향

- 공공구매제도 위반 입찰에 대한 입찰중지명령 제도, 구매실적의 국회제출 등 관련 제도개선안\*을 적극 이행하여 구매실적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15.12월)

- 주관부처(중기청)의 정기 실적점검 등을 통해, 구매확대 유도



#### ④ 기술개발제품 구매 (법정 구매비율 10% 이상)

### 주요 성과

- 기술개발 제품의 평균 구매율(11.8%)이 법정비율(10%)를 상회하고, 법정 구매율 초과기관 수도 크게 증가(20→ 29개)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구매율) : ('14) 3,660억원(9.7%) → ('15) 5,023억원(11.8%)

- 기관의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반영 등 자체 노력을 통해 법정비율 (10%)의 2배 이상 실적(20% 이상)을 거둔 기관도 상당수(8개 기관)

\* 산업부(38.1%), 병무청(36.4%), 농진청(30.1%), 환경부(24.1%) 등 8개 기관

- 병무청 : 소속기관별로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소속기관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독려하여 높은 구매율(36.4%) 달성
- 교육부 : 회계담당자 연수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노력을 통해 높은 구매율(23.7%) 달성

### 문제점

- 전년 대비 평균 구매율은 증가(9.7→11.8%)했으나, 법정비율 미달성 기관도 상당수(13개 기관) 있어, 지속적 구매지원 노력이 필요

### 개선·보완방향

-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준수율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센터\*의 차질없는 설치·운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개발 제품우선 구매 관련 자문·홍보 등 구매촉진 업무를 수행('16년 설치·운영)



### Ⅲ. 기관별 종합 평가



## Ⅲ. 기관별 종합 평가

###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을 합산
  - 정부3.0(±5점), 협업(±3점), 특정시책(±2점)은 가감점으로 반영

### 2 평가 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기재부,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인사처,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 특허청,
보통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안전처, 금융위	법제처, 보훈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원안위
미흡	통일부, 국방부, 공정위, 권익위	조달청,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 IV. 후속조치 계획





## IV. 후속조치 계획

### ①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조치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등 평가 항목의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 개선계획 수립토록 조치
  - 평가주관기관에서 이행상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16년 평가시 반영

### ② 평가결과 우수 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에 대한 훈·포장 수여